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 열린단상

전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길라잡이 : 연구보고서의 활용

CONTENTS

1. 열린단상 / 한영주
2. 현안이슈 / 김보국
3. 연구원 리서치 1 / 조경욱
4. 연구원 리서치 2 / 이동기
5. 연구원 리서치 3 / 나상균
6. 여성정책세미나 / 이윤애
7. 해외 Report / 김진석
8. 연구원 소식

2005년 연구보고서가 출간 · 배포 된지도 한 달 남짓 되었다. 본원은 지난해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선정 등 기본연구과제 20개,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등 수탁연구과제 7개,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 과학기술 자문위원 활용사업 등 4개의 협약사업을 포함하여 총 36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과제는 크게 도정의 핵심시책 지원연구, 현안사업 지원연구, 중장기 발전비전 및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원은 각각의 연구성과물이 도정책심시책에 반영되거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전북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번에 출간한 연구보고서는 본원이 지난해 3월 전라북도의 종합발전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0개월 남짓 짧은 시간동안에 연구역량을 총결집한 결과물이다. 본원은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수확물들이 적절한 수요자에게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팔려나가는지를 지켜보는 농부의 심정으로 보고서의 활용경로를 주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연구결과로 존재성을 입증한다. 아무리 훌륭한 보고서가 나와도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

쳐 서재에서 장식용으로 낯잡을 자거나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소모적 연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생산성과 실용성을 모토로 실사구시적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작년 한해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던 보고서들이 도정의 핵심분야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실무 공무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앞으로도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연구를 수행하며 이의 결과인 보고서 활용채널을 공유할 계획이며, 연구보고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활용도 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활용 평가시스템은 연구책임자가 수시로 법규, 조례 등 제도개선,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정책판단 근거자료, 정보기반구축, 시민 · 관련단체의 이해도 제고, 관련정보내용의 전파 기여, 국제적인 지식교류 및 전파 기여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활용정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가한 연구보고서 활용도 결과는 차년도 과제선정과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될 것이다. 2005년 보고서가 도정 각 분야에 유익하게 반영되어 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고 전북발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전북발전연구원장 | 한영주



새만금 수질악화 최대주범 왕궁 축산폐수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일명 나병이라 불리는 한센병은 만성피부질환으로 전국 88곳의 정착촌에 약 18,250명이 있으며 매년 20명 정도 신규환자가 발병하고 있다.

정부는 1963년에 한센병환자에 대한 격리제도를 폐지하고 정착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특수지역으로 분류하여 외부와 차단된 지역으로 오인됨으로 인해 일반인의 발길이 끊어진 지역으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축산업이 규모가 커지자 자연스럽게 사료공장이나 동물, 약품관계자들의 왕래가 있었지만 부분적인 것이었고 사회와의 거리감은 계속되고 있다.

익산 왕궁면은 지난 49년 5월경 형성된 전국 최대규모의 병력자 정착촌으로 3곳의 정착마을로 구성되어있다. 왕궁면 일대에 최대의 정착촌이 형성된 배경은 해방 후 생겨나기 시작한 정착촌이 타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힌 반면 이곳은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궁면 한센병력자 정착촌은 소록도병원 등에서 투병을 하고 음성환자로 판정된 분들이 대규모로 정착을 하고 있다. 요양원인 소생원에서 시작된 이 정착촌은 초기 250명이 20동의 초가에서 시작돼 90년대 까지만해도 2000여세대 이상이 거주했지만 현재 911가구 1,7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왕궁면 한센병력자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은 대부분 축산업을 통하여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수질, 가축전염병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새만금 수질악화의 최대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왕궁지역 한센병 감염자 1세대(평균연령 65~70세)는 현재 급속히 노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전원 노동력 상실로 돼지사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런 1세대 노동력 상실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외부인이 왕궁지역에 유입하여 현재 돼지사육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노동력 교체는 만약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어서 축산폐수 발생량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외부인이 들어와서 돼지사육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30~40%에 달하고 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중에서 약 0.7%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부하량은 약 8%에 이르는 고농도 폐수로서 미처리되어 방류될 경우 하천의 수질 악화는 물론 호소 등 정체수역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하·폐수와 더불어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어 몇차례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전반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왕궁지역의 축산폐수 문제의 경우 새만금 완공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수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주대책이 최우선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주민, 정치권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이전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원문제, 이주문제, 부지 및 시

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원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지매입,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 지원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확보문제는 왕궁특수지역을 접근하는 가장 큰 열쇠다.

둘째, 이주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왕궁면내 거주하고 있는 1세대의 70~80%는 자녀가 없고, 자녀가 있더라도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부모와 정착촌을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해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령화된 1세대를 포함한 관련지역내 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부지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기위한 재원 550억원(국비 406억원, 민자 144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9월부터 보강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중복투자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보재원과 기존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을 중복투자없이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비, 민간자본의 재정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왕궁지역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문제의 해결은 축산폐수발생 근원의 원천적 제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 후 이주자의 타지역 및 왕궁인근지역 축산업 재진입 가능성 제거, 타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 순천 한동농원의 경우 개별이주를 선택하였으며, 부산 남구 용호농장의 경우 아파트를 건립하여 집단이주 방법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들의 지혜가 모아졌으며 하는 바랍이다.

환경·지역개발연구원 | 김보국



경제적 빈곤과 우울한 노년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양태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고령화 시대의 중요 화두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주 및 건강의 유지는 물론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기본

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에게 자신의 소득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계청(2004)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1/3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일거리 없음'과 '직업 없음' 등 모두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노인생활의 어려움으로 거론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1/5이 노인이라는 점, 이들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전체 노인의 1/10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생활은 지극히 열악하며 노인들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젊은 청장년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전라북도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는 어떤 상태이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일까?

전라북도 노인들의 경제생활 및 건강, 여가 등 노인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전라북도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출간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전라북도 고령인구 변화 추이를 통해 전북노인들의 경제적 빈곤과 궁핍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3.96%(2005년말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노인이 39.1%, 여성노인이 60.9%로 여성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구성비가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연령단계별 변화추이를 보면 65-74세의 전기(young-old)노인의 비율은 1980년 69.5%에서 2004년 65.2%로 4.3%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75-84세 노인(middle-old)의 비율은 같은 기간 안에 26.2%에서 28.8%로 85세 이상 최고령(old-old)노인의 비율은 4.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북 노인인구의 경제적 취약성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과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북은 12.2%로 전국평균 비율보다 4%정도 더 많다.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여성은 28.5%, 남성노인은 43.0%로 전국의 평균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전북노인들의 월 평균소득은 55.9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 분포에 있어서는 월 20-40만원 미만이 30.2%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1/3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노인들의 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61.6%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노인의 일과 직업에 의한 근로소득은 단지 33.8%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원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의 40.6%는 근로소득이 있는 반면 여성노인은 단지 28.0%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자녀로부터의 보조와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월평균생활비는 55.4만원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2004년) 71만원 보다 15.6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미만의 최저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은 남성14.3%, 여성 36.4%로 남녀 간의 격차가 컸으며 10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0.3%나 되어 계층 간의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는 보건 및 의료비(34.6%)였으며 이는 여성노인에게서, 연령이 낮은 전기노인에게서, 시부지역 보다는 군부지역에서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북노인들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은 아주 열악하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노인층의 인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기에 출생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성장했다. 또 이들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고 대다수가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 하였지만, 가치관의 변화로 더 이상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 비하여 사회적인 노인부양체계는 미비하며 개인역시 노후와 노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직접적으로는 노후 생활비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위축, 가족 성원 및 친구관계, 건강상의 문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가구주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보건의료비보다 식료품비 소비를 줄임으로써 어려워진 경제현실에 적응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 늑기도 서러운데 먹는 것조차 줄여가면서 외롭고 쓸쓸한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 대한 무한적인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팀장 | 조 경 옥

공연예술의 침범 역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활성화에 있다



전라북도 문화의 트렌드에 중심에 서 있고 문화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과 질 높은 공연예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화 창조적인 도시를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과 문화와 예술을 통한 창의성 함양, 문화적 리더십에 대하여 심도 깊은 고려를 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차원으로는 문화도시전략과 도시의 다양한 레퍼토리,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the art of adding value)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공연예술의 대중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 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국 최대의 공연장과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의 관소리 공연장으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고 전북권의 문화 및 공연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지역 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자 지역을 재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문화 코드, 주변 환경의 변화와 문화 생성에 대한 도민들의 흡입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선택에 의해 광주 지역에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이 설립되어 잠재적인 문화인력 및 관람객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재정지원 약화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연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감소상태에 있는 관객 규모, 대중문화나 오락산업의 발전에 따르는 고급예술 분야의 위축, 공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약화와 잠재적인 관객개발의 소홀과 같은 문제들이 증첩되어 공연예술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공연예술실태 조사에서 전라북도의 공연장수는 31개소로 전국 3위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동률은 평균 37.3%, 전국 13위로 나타나 가동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북 지역의 공연장에서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가동률은 평균 69%(2004년기준)이며 이 중 연지홀 74%, 모악당 61%, 명인홀 47%, 예술회관 3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가동률이 전북 공연장의 가동률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모악당 99.9, 연지홀 100, 명인홀 99.2순으로 나타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평균보다 가동률이 높고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소리문화의전

당은 30억원의 지원을 받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자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액을 비교하여 보면 규모면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보다 적은 창원성산아트홀이 32억원, 의정부예술의전당이 30억 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7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도 최소한 40억원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 운영 현실화와 더불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직원의 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기술 전문 인력의 유출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최첨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숙련된 기술 인력은 좀 더 조건이 좋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신분상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직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간위탁 사업자의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직원들도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전문화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문화마케팅 중심의 경영기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문화환경의 변화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영 합리화에 대한 중요성과 문화마케팅 중심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영리조직의 경쟁력과 비영리조직의 공익성을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공연예술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를 기획, 제작, 생산,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해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교육 연계 프로그램, 기업 및 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추진 등 다양한 연계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연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간 문화 환경을 균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운영은 주로 공연예술에 치중하여 있고 공연장의 이용시간은 주로 저녁 시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괄적인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어, 문화예술,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극대화하여 도민들의 이용 및 문화예술 시장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도시는 어떻게 그 문화를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흡수하느냐라는 도시적 명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소비 주도 세력에 맞춰 성장해 나가는 상업시설과 마찬가지로 문화 오아시스로서 문화 프로그램의 유익성은 물론이며, 문화 주도 세력에 맞춰 정량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도시와의 동시적인 소통 및 가속화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코드와 행위코드들에 대한 고려, 그 외 명제로서 문화적인 경험의 구조를 순수하고 가치 있는 문화상품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은 이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몫이다.

문화·관광연구팀장 | 이동기

중소기업 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정부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체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다양한 법제도의 영역에 투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생산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및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격차가 과거보다도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영 하듯 현재 전북지역의 중소기업은 부도업체의 급증, 생산거점 해외이전의 가속화 등 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현황은 소기업 106,303(97.8%)개, 중기업 2,232(2.1%)개, 대기업 86(0.1%)개 업체로 전체 기업 중 소기업이 9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소기업 252,075(72.2%)명, 중기업 71,004(20.3%)명, 대기업 26,031(7.5%)명으로 대부분 소기업에 종사는 종사자가 전체 비중의 7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자금 조달은 금융기관 87.9%, 사채시장 3.2%, 적립금 및 주식발행 등 자기자본 4.0%, 회사채 발행 1.1%, 임직원 차입 3.8%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는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3.1%, 해당인력 부재 39.0%,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의식 20.9%, 임금 조건 불 일치 16.9%, 작업환경 요구 차이 8.8%, 지역 내 해당 인력 부재 1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 인력 부재와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의식으로 인력수급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기술협력 취약 사유는 상호 신뢰 구축 미흡이 30.4%, 인센티브 부족 10.4%, 협력촉진 위한 법적 장치 취약 21.6%, 협력파트너 역량 부족 24.6%, 기타 13.0%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파트너의 역량 부족으로 산·학·연 기술협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경영상황이 열위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된 것이기 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입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보다는 잘하는 기업, 능력 있는 기업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체계는 중앙부처 또는 개별지원기관이 지역본부들 통해 기업으로 연결되는 분산형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중앙부처의 지원과 개별지원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기능은 과도하게 중복되고, 어떤 특정 기능은 지원되지 않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와 개별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부재로 인해 탐색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주로 오프라인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원기관은 기업 정보 파악이 어려워져 어느 기업이 적절한 지원 대상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기업은 적합한 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지원기관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자금, 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개별지원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지원을 받는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기업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간 교류 및 이업종 교류가 중요하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구비되어 있고, 기술개발 및 혁신창출을 위한 지원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지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학 연구센터, 연구소 등 혁신자원의 공간적인 직접에 관심을 두고 있어 기능적인 연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지원은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및 확충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산형 공급자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형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의 전문화 및 차별화를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 되고 있다.

첫째, 보호육성이 아닌,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이 경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신용보증 중심의 금융지원 시스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 되어야 하고, 직접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신용보증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별 접근 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는 단순 하청관계가 아니라 자원, 기술,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하도록 상생관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부터의 기업 간, 민간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성장단계별로 시의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금융지원에서 각종 행정·정보제공 및 인프라 보완 위주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창업을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창업지원을 특성화 하고, 창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화, 보호육성 차원의 의무적 지원이 아닌 지원기관의 수익 창출과 직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적인 기술 선도형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시행이 되어야 한다. 개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형태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주체인 정부와 수혜자인 기업 상호간에 순환적 자극을 주는 '인센티브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015, 여성정책의 미래비전

지난해 11월 11~12일 양일간 정읍에서 전국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여성정책네트워크」 주최로 여성정책의 장기비전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2005년 현재 시점에서 여성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10년 후 여성정책 환경에 대한 전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의제의 출현을 예측해 보는 자리였다. 즉, 미래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목표, 주요과제를 추출하여 국가발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요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란은 이 날 세미나에서 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 했다.

편집자註

우리에게 앞날은 언제나 호기심의 대상이다.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 인간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술한 책들이 올려진 것만 봐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여성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10년 후 혹은 15년 후, 미래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목표, 주요과제를 추출하여 국가발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요 근거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여성정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여성의 권리강화와 사회 각 부분의 참여 제고, 여성정책 이행기구의 기능강화, 정부정책에서 양성평등 관점의 개입, 정책대상의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한 의제를 확산시키면서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을 정책기조로 확립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시점에서 고찰해 본다면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의 진입을 가로막는 직간접적인 차별적 관행은 잔존하며, 성별분업을 기초로 한 젠더관계는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전 분야에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노동권과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심각한 국가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나 성매매관련법 등의 정책입안과정에서 보면 여성정책이 진전됨과 동시에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거센 저항을 경험했으며, 이는 여성정책의 지평과 정책수단을 국민전체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 다원화, 지역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면서 전체 사회구조 및 일반인의 의식변화가 빠르고 다양하게 진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에 대두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환경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젠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먼저 여성인구 특성 및 생애구조변화를 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최저출산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체 인구성장이 둔화될 전망이고, 생산인구는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 여성의 점유율이 높아져 노인정책에서 젠더관점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모두 삶의 방식에 있어 결혼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가족구성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출산을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혼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부양체계의 전환과 평등한 가족관계 요구는 증대될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삶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신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전은 여성들의 생활영역 제한이 완화되고 근로형태의 유연성은 증가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변화의 주류에 통합될 가능성을 제고해줄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되고 따라서 여성의 생애주기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난자매매, 대리모 등 여성의 재생산력 상품화가 진척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미 황우석교수 사태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여성의 재생

산력의 상품화는 인권침해 문제의 발생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문제로서 더욱 증가될 수 있다. 네트워크사회와 세계화시대에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의 등장으로 새로운 의식과 다원주의적 가치의 중시경향이 높을 것이며, 젠더문화의 다양화와 젠더관계에 대한 변화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른 의제변화와 여성과 남성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젠더문화와 정책패러다임이 요구될 것이다.

신경제패러다임과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은 여성근로자들에게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위기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형태의 유연성은 여성근로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고용조건과 노동강도를 악화시킬 수 있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은 여성의 고용기회가 증대되기도 하지만 고속련-고임금, 저숙련-저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여성빈곤을 고착화시켜 여성집단 내 차이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증대된다. 연금 등 사회보험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들의 가입비율이 낮아 향후 실질적인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 여성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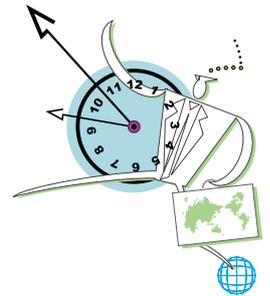
분권화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이 생활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될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의 증가와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리더십이 요구되고, 기존의 부패하고 폐쇄적인 정치문화 쇠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리적 국경의 개방이 활발해지면서 초국적인 인구이동성이 증가하고, 특히 결혼과 취업을 위해 이주해 오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의 문제는 향후 여성정책의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15에 대한 사회적 전망은 향후 여성정책의 목표를 빈곤의 여성화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적 자본획득기회를 제고하는 한편, 여성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건강권과 자율권 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분담과 양육과 부양의 역할을 공유하고, 고급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젠더의제에 대한 남성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젠더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연구원 | 이윤애



대만신죽과학산업단지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대만의 신죽과학산업단지(新竹科學工業園區: 이하 신죽단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한 과학산업단지 가운데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신죽단지는 타이페이 남쪽 70k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이며, 장제스 국제공항에서는 40분 거리에 있다. 단지의 면적은 625ha이며, 2004년 말 현재 384개 기업에 11만5천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신죽단지의 개발은 1976년 후에 대만 총통이 된 장징궈(蔣經國) 당시 행정원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으로, 과학산업과 생산활동을 상호 집적·연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여기에 고급 기술인력과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대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1979년 특별법인 '과학공업원구설치법'을 제정하고 신죽단지 관리국을 설립하는 등 제도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1980년부터 단지의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4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신죽단지의 성장은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대만정부는 신죽단지에 2000년까지 150~200개 기업을 유치하여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지만, 입주기업과 종사자수가 이미 1993년에 150개 기업, 2만8천명에 달하였으며, 1996년에는 200개 기업, 5만5천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신죽단지의 성공요인과 과제

신죽단지가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대만 정부의 기업유치 전략과 노력이다. 신죽단지는 조성초부터 국내·외 기업들의 대거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초기의 성공에 따른 기업집적은 활발한 추가 유치로 이어졌다. 대만 정부는 세계 각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입주기업들에게 특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유치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해외의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이들이 신죽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국립실험고등학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학교에서는 2개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시스템과 창의력과 논리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이들 고급인력이 자녀교육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는 산업의 전문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집적경제 실현이다. 신죽단지는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특화하여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기술적·생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특화는 관련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는 생산활동과 연구개발기능의 효과적으로 연계이다. 대만정부는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를 개발모델로 하여 연구와 생산을 결합시키고자 계획하였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원(ITRI)과 국립대학인 지아오통대(交通大)와 칭화대(清華大)는 기업들을 위한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특히 ITRI는

개발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개발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한 연구인력들의 활발한 창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죽단지가 첨단산업집적지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넷째는 단지의 특성화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신죽단지는 처음부터 대규모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지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단지의 설계도 정보통신산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신죽단지는 지금까지 4단계에 걸쳐 단지규모를 확대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를 개발모델로 삼아 단지 내의 지식과 정보교류의 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단지 중앙으로 고속도로가 관통하도록 하고 그 주변에 연구개발형 기업, 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점진적인 단지의 개발과정에서 기업들이 가로를 따라 조밀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죽단지의 조성을 위해 대만 정부는 신죽단지관리국을 설치하여 첨단기업의 활동에 적합한 단지조성, 기업유치, 기업경쟁력 제고 활동 등 체계적인 단지의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신죽단지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먼저 산업의 특화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는 것으로, 2000년대 초의 세계적인 컴퓨터산업의 불황은 정보통신산업으로 전문화된 신죽단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신죽단지의 성장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OEM생산에 의존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신죽단지의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다는 점이다. 신죽단지는 단지를 벗어난 신죽지역과는 거의 연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고립된 섬(enclave)' 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 신죽단지의 시사점



전라북도에서도 신죽단지와 마찬가지로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그 성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전북TP 등 과학산업단지의 성격을 지닌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죽단지의 성공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산업의 전문화, 산학연계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전략의 수립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 김진석

1) 이러한 신죽지역과의 단절은 "단지내에서는 칩(chips)이, 단지밖에서는 쌀국수(rice noodle)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나, "신죽단지는 Group III-V의 원리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쌀국수는 신죽의 전통적인 식품산업을 의미하며, Group III-V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신죽단지 종사자들을 빗댄 표현이다.

▣ 본원 · 전북도, 도정현안 간담회

본원과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정현안사업과 관련된 의제를 선정해 실국별로 정례간담회를 갖고 발전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첫 모임으로 1월 18일 전라북도 기획혁신전략본부 안세경본부장, 최훈기획관, 본원 한영주 원장과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갖고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올해 3대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본원은 전라북도의 정책자문 및 싱크 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본원 신년 기자 간담회



본원(원장 한영주)은 2월 1일 전북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도 연구사업 실적 보고에 이어 ‘2006년 연구사업계획’을 발표 했다.

금년도 연구사업은 도정의 핵심시책 지원연구, 현안과제 지원연구,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초연구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도정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시책 지원연구로는 ‘기업유치 및 인적자원 수급계획’, ‘경쟁력있는 문화관광 실현’ 등에 역점을 두었고 현안과제 지원연구로는 ‘새만금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 ‘세계적인 모범 혁신도시 건설’,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제언’ 등을 선정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초연구로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전라북도 GIS 추진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본원 여성정책연구소 전정희소장도 2월 7일 여성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6년도 여성정책연구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본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가 도정의 각 분야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 활용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혁신도시 추진기관협의회 개최

전라북도혁신도시 추진기관협의회 제1차 회의가 2월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발전연구원등 8기관이 협의회위원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추진기관협의회 발족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혁신도시 조성일정,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8개 협의회 기관은 전북발전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전북개발공사 등이다.

▣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는 2월 10일 썬플라워컨벤션홀에서 전체회의 및 분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등을 심의하고 분과협의회별 정책과제 발표가 있었다.

원장 동정

*왕궁특수지역 현장방문

본원 한영주원장은 1월 23일 강현욱지사와 도관계자, 도의회 의원등과 함께 왕궁특수지역을 방문하고 왕궁특수지역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 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벤치마킹

본원 한영주 원장과 박형창 연구위원은 2월 3일(금) 전북도관계자등과 함께 성공적인 외자유치 및 개발사례로 평가받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다.

방문단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들러 새만금방조제 마무리공사에 따른 내부개발과 관련해 토지이용계획, 해외자본 투자 유치활동 등 효과적인 외자유치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열린게시판

◆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홍보동영상 방영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도민의 지역혁신에 대한 인식제고 및 혁신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동영상 제작하여 도내 3개 TV방송사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각 방송사별 홍보주제는 투자유치(MBC), 전북관광(JTV), 혁신도시(KBS) 등이다. *방송기간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12.30~06.03.05)

◆ 2006년 제1차 콜로퀴움 개최

주제 : 지능형 미래도시를 위한 새만금 신도시 UCT
 발표 : 이홍로(군산대 교수)
 일시 : 2006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 인사

본원 2월 1일자 인사 발령
 • 기획조정팀장 | 안완기
 • 산업·경제연구팀장 | 이승형
 • 문화·관광연구팀장 | 이동기
 • 정보지원팀장 | 이한호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